

# 文대통령 “백신 보급 속도 있게 추진…중산층 주거안정 중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주재…“내년 빠른 경제 회복”

“재정 정책 수단 총동원…민생경제 확실한 반등”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주요 경제 정책의 자문 역할을 한다. 주요 경제 정책 현안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전달

하는 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네 번째 개최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에 기반한 K-방역의 성과를 언급하며 자긍심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그 자신감 위에서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다.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용 회복세가 더디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는 한발 앞서 준비해 왔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이고 스마트하게 바꿔왔다”며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도 마련했다.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라며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며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에 사전정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

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 방향은 오늘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는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함께 마련하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민생 회복과 우리 경제의 상생 도약을 위한 튼튼한 디딤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아특별 안전조정위 野 반발 끝 파행…“이상직이 야당이나”

전날 국민의힘 아특별 안전조정위 회부 신청



국민의힘은 17일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별)에 대한 안전조정위원회에 더불어 민주당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했다며 반발했다.

이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복당을 위해 사실상 여당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대량해고·임금체불 논란에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전조정위는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종료됐다. 아특별은 전체회의에 재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

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동관에서 “민주당이 오늘 가장 최악의 형태로 국회법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안전조정위를 요청해 여야 3 대 3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야당 몫 3명 중에 1명으로 이상직 의원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전조정위는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전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다. 동상 사회적 갈등과 여야 간의 첨예한 이견이 있는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

전날 국민의힘은 아특별에 대해 “조직 규모가 비대해지고 국가 지원 예산이 많아진다”고 반대 의사를 표

하며 안전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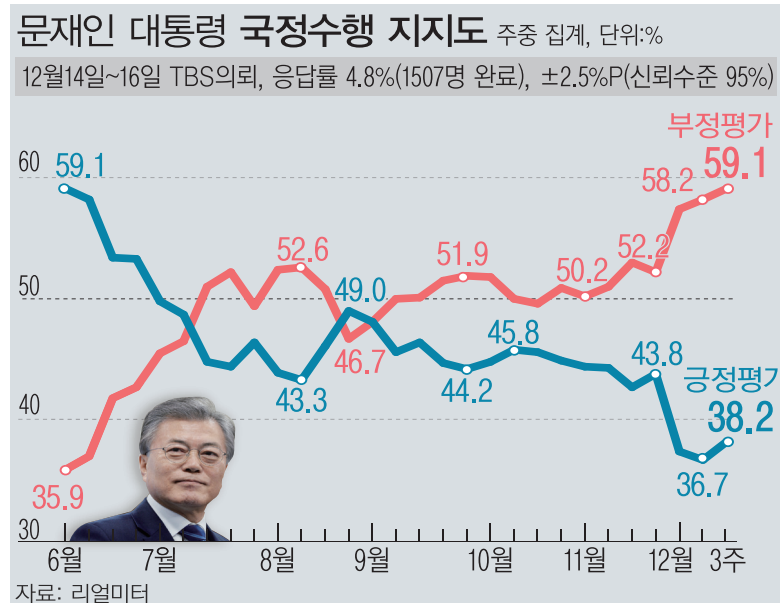
안전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 조정을 위해 여당 3명, 야당 3명 동수로 구성되지만 야당 비교섭단체 몫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포함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등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무력화된 바 있다.

최 원내대변인은 “안전조정위원회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중요한 쟁점 법안에 대해서 숙의할 수 있도록 제 1당과 제 2원내 정당 비율을 맞춰, 3 대 3 동수로 최장 90일 동안 숙의토록 하는 것이 그 취지”라며 “그러나 여당이 임명한 이상직 의원이 누구인가. 계속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야당 의원이나 이 분이”라며 “문체위에는 지금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있다. 윤상현 의원은 어제 전체 회의에도 출석했을 뿐 아니라 만일 안전조정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원래 국민의힘 출신이고 국민의힘에 대한 복당 의사도 있으니 야당에 해당하는 몫”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文대통령 지지율, 1.5%p 오른 38.2% 진보층 주도 ‘상승 반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상승 반전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실시한 12월3주차(14일~16일) 주중 잠정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1.5%포인트 오른 38.2%(매우

잘함 22.2%, 잘하는 편 16.0%)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9%포인트 오른 59.1%(매우 잘못된 47.3%, 잘못하는 편 11.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4%포인트 감소한 2.7%다.

긍정평가는 11월4주(43.8%) 이후 12월1주(37.4%), 12월2주(36.7%) 등 하락세를 이어오다 3주 만에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지지율은 계속해서 30%대를 유지, 금·부정 평가 차이도 20.9%포인트로 여전히 오차범위 밖 결과를 보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부산·경남(6.2%p)과 서울(6.1%p ↑)에서, 연령별로는 30대(4.9%p ↑)와 50대(4.3%p ↑), 20대(4.1%p ↑)에서 상승 폭이 컸다. 이념별로 보면 중도층(3.9%p ↑)에서, 지지 정당별로 보면 열린민주당(7.4%p ↑), 민주당 지지층(3.9%p ↑)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무직(3.3%p ↓), 노동자(4.8%p ↓), 자영업(2.7%p ↓), 학생(2.3%p ↓)에서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진보층(4.7%p ↑)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여성(3.6%p ↑)에서도 지지율이 올랐다. 40대(2.5%p ↓), 광주·전라(8.4%p ↓)에서는 하락했다.

뉴시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